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Alternative Urban Strategies for Post-neoliberalism

최병두**

최근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지구적 금융위기와 사회공간적 양극화의 심화 등과 같은 가시적 현상들로 드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탈(또는 반)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와 대안적 도시 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공간적 규모’ 접근과 대안적 도시 공간 전략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피상적이거나 또는 한정된 주제에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 후,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도시화의 가능성 및 숙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지구지방화 운동 및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적, 실천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주요어: 신자유주의, 탈신자유주의, 공간적 규모 접근, 대안적 도시계획, 도시에 대한 권리

1. 머리말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적 상호의존성(수평적이라기보다 지배/종속 또는 불균등한 상호의존성)을 강화시켜 왔을 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27).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만 아니라 엄청난 잉여자본을 투기적으로 투입한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들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도시화과정을 추동해 왔다. 그러나 하비(Harvey, 200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는 실제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기적으로 지구적 금융위기를 가시화시키면서, 국가적, 도시적 차원에서 경제의 침체,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갈등, 정체성의 불안정, 자원 고갈과 환경 퇴락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직면한 이러한 내재적 한계 및 결과적인 문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탈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적 도시공간 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최근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탈(또는 반)신자유주의의 전망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이론(예로 ‘대안세계화’ 이론 또는 이념)이나 매우 보편적이지만 한정된 주제들(예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의 개념 등)에 국한된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탈)신자유주의의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2가지 사항, 즉 첫째 신자유주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공간적 규모의 문제, 둘째 신자유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도시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관심(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탈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공간 규모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안적 도시화와 도시계획 및 도시 실천 전략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대안적 체제로서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최근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화와 도시계획을 위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이의 주요 유형들과 내용들(특히 숙의민주주의와 공적 공간)을 살펴보고, 끝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지구·지방적 운동의 의의 및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이후 대안적 체제로서 탈신자유주의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에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그 영향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적 금융 불안이 증폭되면서 세계 금융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즉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이나 부도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구제 금융으로 사상 최대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고, 세계경제 선진국들과 이에 준하여 한국과 같이 점차 세계화 과정에 편입하게 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금융위기의 세계적 충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국가들과 이들을 추동하는 초국적 자본은 국가적 및 지구적 차원에서 기존의 경제정치체제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에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해소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치 질서를 규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편으로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미국경제도 최소한 가시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1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재정위기는 유로 존의 붕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더블 딥(double dip)의 우려를 끊임없이 지속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지구적 금융위기의 내습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한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이를 지탱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위기 또는 이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심지어 신자유주의가 마치 끝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이제 조급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그 자신의 충격으로 마침내 종말을 맞게 되었고, 보다 인간적인 ‘탈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어 한다(Harvey, 2009b; Peck, et al., 2010).

그러나 금융위기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앞으로 위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설령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시장개입과 세계 선진국들의 다자간 협력적 대응으로 금융위기의 공포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30~40년 동안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가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해체되었다면, 지금은 어떠한 체제가 주도하고 있는가? 세계 금융체계의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세계 어느 국가에선가 더블 덩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세계 정치의 거버넌스 체제가 시장에 일정하게 개입했다고 하지만 이를 추진한 정치·정책가들은 여전히 시장메커니즘의 복원을 위해 이에 개입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심상도(neoliberal mind-map)’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변화로 재구조화된 국가적 지구적 경제정치체제를 더 이상 신자유주의라고 지칭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최병두 외, 2010: 229~26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우리들 사이에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을 이루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우리 앞에 들어닥쳤던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체제가 신자유주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둔한 짓일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제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화’ 과정, 특히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위기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2008년의 금융위기와 비교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여러 위기들, 대표적으로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채무 불이행, 1996~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사태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확산되었다. 물론 2008년 위기는 그 앞의 위기들에 비해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이전의 남미 또는 동아시아의 위기는 지구경제의 (반)주변부에서 발생하였고 사실 이 위기를 통해 선진국의 초국적 자본(특히 금융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지만, 2008년 지구적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지구경제와 정치적 거버넌스의 심장(즉 미국 금융체제 및 권력 헤게모니의 작동 메커니즘의 중심부)을 과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시장 신뢰성과 정치적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Peck et al., 2010).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화의 위기의 발화 장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위기들을 관리한 체제는 동일하게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거버넌스,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현재에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그 이후 설령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경제정치체제는 결국 신자유주의화의 연장선상에서 경로의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고 기존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대응책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시장경제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노정시켜 왔으며, 이러한 위기들을 통해 재구조화되고 재강화되어 왔다. 달리 말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이의 발발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존 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자유주의 체제는 붕괴하지 않는다. 예로 1997년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의 처방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어느 정

도 해소되었던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한계나 지구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다자간 협력에서의 불협화음 등이 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 또는 붕괴를 추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점은 위기에 처한 신자유주의에 도전하여 이를 능가할 대안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신자유주의가 외형적으로 모습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지구적으로 확산된 시장규율적 신자유주의 체제를 탈안정화시키고 재편하고 궁극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반(反)신자유주의화 전략이 없다면,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규모에서 신자유주의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다(Brenner et al., 2010). 요컨대 신자유주의의 극복으로서 탈(post)신자유주의의 도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기존 거버넌스 체제의 실패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탈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습과 이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Peck et al., 2010).

2)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의 의의와 한계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는 현재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탈신자유주의’라고 지칭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탈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상이한 반응과 심화되는 모순 및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여 드러난 모순 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들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탈신자유주

의에 관한 관심은 신자유주의의 등장 초기부터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예로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으로 이미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지역이나 국가(미국이나 영국에서부터 멕시코, 남아프리카나 태국, 중국 등), 영역(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이나 차원(도시나 지역, 국가, 국가 블록 등), 그리고 운동의 실천 방식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정성진 외, 2010 등 참조).¹⁾ 물론 이들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어떤 특정 측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기반을 두었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를 시장메커니즘과 동일한 것으로 혼돈하고, 자기규제적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개입과 재규제가 탈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조짐 또는 대안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Brand and Selker, 2009: 6). 대신 탈신자유주의의 다양한 전망들은 물질화된 자본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재규제 전략이 아니라 대안적 주체들에 의한 새로운 규제 전략과 이를 추동하는 사회운동에 관심을 두게 된다.

신자유주의화의 위기는 지구경제의 반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인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보다 최근 2010~2011년 현재 신용등급 강등과 구제금융 압박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사태로 국지화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미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지리적 불균등 발전과 더불어 그 위기의 불균등한 국지적(또는 국지화된) 발생으로부터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어떤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펙 등(Peck et al., 2010: 11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붕괴의 가능성을 줄여

1) 또 다른 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도좌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탈신자유주의’ 담론은 허구적이며, 그 본질은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라고 비판되기도 한다(본드, 2010).

주지만, 또한 이는 다양하고 영역별, 장소별로 특징적인 다면적 저항에 봉착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가 독점적 정치 블록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북유럽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재)구성되고 발전해 온 것처럼, 탈신자유주의 또는 이에 대한 반(反)체계모니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Sekler, 2009).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체제에 관해 논의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보수주의 정권의 이른바 부자 감세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해 유발된 지구적 금융위기 및 한국의 금융·부동산 사태,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할 것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리고 다소 성급하게도 금융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대안적 체제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맑스코무날레 조직위원회 편, 2007; 정성진 외, 2010; 정진상 외, 2010; 정진상 외, 2011 등 참조).

신자유주의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들은 그 동안 유지되어온 신자유주의체제가 위기를 통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논의보다는 신자유주의와 단절된 형태의 규범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로 편향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제시된 주요 이념은 부르주아 반자본주의, 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 개혁주의적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자율주의 등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한 대안적 체제들로는, 예를 들어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론, 노동중심통일경제연방론, 사회연대국가론, 사회투자국가론, 신진보주의국가론, 복지국가혁명론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정승일, 2007; 정성진, 2010; 이정구, 2011 등 참조).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체제와 대안 운동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비록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이

에 내재된 주기적 위기 상황 그리고 이를 해소한 이후 재구조화된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고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시장의존적 개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또는 위기(예로 사회 양극화, 일자리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사회경제적 충격 등)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바탕을 둔 지구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체제로 한국적 상황(통일연방제)을 반영하거나 사회투자, 복지 또는 생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체제의 제시하는 지구·지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성을 무시한 채 상당히 피상적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체제를 그 이전의 체제와 매우 다른 체제 또는 단절된 체제(즉 반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전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규제적 재구조화의 궤적은 그에 앞선 신자유주의화의 작동들이 분절적으로 접합되었던 장소·영토·규모-특정적인 정치·제도적 형태에 의해 강하게 모양 지워”질 것이기 때문이다(Brenner et al., 2010: 343). 즉 신자유주의가 사회공간적 경로의존성을 전제로 전개되어 온 것처럼,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적 노력 역시 한편으로 지구적으로 전개되어 온 보편적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대안적 전략은 국지적인 특정 조건들을 반영하는 경로의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로 보다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들의 대부분이 공간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이 공간적 차원에서 작동하며 이에 따라 탈신자유주의의 대안도 공간적 차원에서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들을 다규모적으로 내포해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점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제시된 신자유주의 이

후 대안적 체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대안적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또 다른 유형의 ‘세계화’를 전제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즉 이러한 논의들은 ‘공간적 규모’에 관한 개념을 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²⁾ 사실 신자유주의는 어떤 일관된 정치경제체제에 의해 추진된다기보다는 시장 보편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여러 방안들(예를 들어 금융화, 탈규제, 노동의 유연화, 민영화, 무역자유화 등)에 바탕을 두고 지역적, 국가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처럼,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는 한편으로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지적 자원 수급체계와 문화, 가치, 운동 등에 뿌리를 둔 대안적 경제체제와 거버넌스, 생활양식 등의 국지적 구축, 그리고 국지적 대안 체제들의 국가적 나아가 지구적 연대를 주요한 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화와 도시계획

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새로운 도시화의 모색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비공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 지리학 및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나아가 탈신자유주의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논의를 명시적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브렌너(Brenner)와 펙(Peck) 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 (Peck et al., 2009; Peck et al, 2010; Brenner et al., 2010 등 참조)은 신자유주의

2) 물론 이러한 지적은 ‘대안적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공간환경적 측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세계화운동을 공간적, 지역적, 환경적 측면과 관련시켜 논의한 사례로 장대엽(2010), 김창근(2010), 본드(2011) 등을 참조.

의 실제 전개과정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이후’ 또는 ‘탈신자유주의’의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공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기존 입장에 대한 전략적 반대와 더불어 시장보편주의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전망에 대해 포괄적이고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급진적 대안으로 국지적 발전 양식의 인식과 재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eck et al., 2009). 나아가 이들은 “반신자유주의화의 규제 실험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특히 도시적 맥락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화 정책 이행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없다면 이들은 특정 장소, 규모, 영토 내에 한정된 채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Brenner et al, 2010: 342~343).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반신자유주의화의 실험이 특히 도시적 맥락에서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판적 입장에서 제시된 기존의 지리학적 연구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는 예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체제를 공간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로 김창근(2009)의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 대안으로 지역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지역화(또는 국지화, localization)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무역과 그에 따른 자본의 다른 공동체[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또는 이전 위협이 공동체와 환경에 커다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소비를 위한 지역생산으로서의 경제의 지역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³⁾ 즉 지역화론은 기업의 이동성을

3) 특히 세계화국제포럼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공동체, 지역, 국가로부터 권력, 결정권, 선택권, 기능을 빼앗고,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공동체, 지역, 국가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탈지역화”로 규정함에 따라(김창근, 2009: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국적 기업”의 주요한 문제, 즉 “공동체 외부 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재소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자기의존적으로 지역화된 경제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소규모 지역기업’과 ‘농업지역화’를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의 지구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러한 ‘지역화’ 또는 국지화 전략은 도시적 규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통제 받지 않는 소규모 지역기업과 자급적 식량·에너지 수급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 도시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교통통신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한 도시나 지역이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폐쇄된 공동체로 존립·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보다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지역화’이라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 자체가 탈신자유주의 나아가 탈자본주의의 대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소규모 자급자족적 지역공동체가 지구화된 자본주의적 공간환경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공간적 규모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크다 또는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규모에서 어떠한 가치와 권력을 위해 구성원들이 조직되고 실천양식이 행사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조직과 실천이 전개되는 공간적 규모들 간에 어떤 관련성이 내재하는가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한다(Albo, 2006).⁴⁾

15), 대안세계화 운동들 가운데 특히 지역화(localization) 운동은 WTO와 IMF 그리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반대하면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소농과 빈농, 그리고 선진국의 지역활동가와 다양한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4) 심지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지역주의(localism)이 옹호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세계은행은 “지역수준에서 정치적 책임과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는 공공자원 이용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과 지역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 증대라는 경제적 목표와 일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앨보, 2007: 423 재인용).

<표 1> 지구-지방화를 배경한 도시주의의 세 유형

구분	세계도시론 (global city)	세계시민적 도시론 (Cosmopolitan city)	초국가적 도시론 (transnational city)
주창자	사센(Sassen, 2001), 프리드먼(Friedman, 1986)	샌더콕(Sandercock, 1998), 더글러스(Douglass, 2008)	스미스(M. P. Smith, 2001)
이론적 기반	세계체계론	세계시민주의	초국가주의
특성	· 지구화시대 경제·금융· 정보의 중심지, · 세계적 네트워크와 허 브로서의 장소	· 문화적(인종적, 성적) 다양성의 규범적 도시 · 시민사회의 공적 공간으 로 도시권(시민권) 보장	·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 워크의 도시 · 지방문화공간의 역동성 과 미분적 권력 구성
문제점	· 선진국 중심 경제결정론 · 주체의 정책 활동 간과	· 물역사적 보편주의 · 대안경제 공간 부재	· 미시주체적 환원주의 · 초국가적 네트워크 한정

자료: 광노완(2009)에서 정리.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개별 도시나 지역의 탈신자유주의적 재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전개되어 온 국지적, 국가적, 지구적 규모들 간 재구조화를 전제로 한다. 광노완(2009)은 공간적 규모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 요구되는 비판적 도시담론의 주요 이론들로서 세계도시론, 세계시민적 도시론 그리고 초국가적 도시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표 1>), 그 연장선상에서 고대 폴리스와 아고라를 재검토하여 지구적으로 열린 공적 공간으로서 ‘글로벌 폴리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3가지 도시이론 또는 도시주의 가운데 프리드먼(Friedman, 1986)과 사센(Sassen, 2001)이 각각 다소 다른 입장에서 주창했던 세계도시론은 지리학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체로 세계체계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최근 세계시민적 도시론과 초국가적 도시론은 각각 세계시민주의와 초국가주의에 관한 철학적 및 사회이론적 논의를 공간적 차원 또는 도시적 배경에 원용하면서 특히 도시적 맥락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도시론에서 ‘세계도시(global/world city)’란 경제·금융·정보 등의 지구적 중심지로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전략적 사이트 네트워크의 기능’이

강조되는 한편, 국민국가적 경제와 영토에 의해 제약되며 구체화되는 장소적 특성을 가진다. 즉 세계도시론은 오늘날 세계적 네트워크와 허브로 기능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세계도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샌더콕(Sandercock, 1998)과 더글러스(Douglass, 2008) 등에 의해 제시된 세계시민적 도시(cosmopolitan city)란 ‘의미 있는 문화적(인종적, 종족적, 성적)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도시’, 즉 조화와 공존, 다양성과 다문화론을 가진 도시를 지칭하며, 특히 이질적이고 다양한 활동적 시민사회의 공적 공간의 구축과 이에 의해 보장되는 도시권(시민권) 보장이 강조된다. 즉 세계시민적 도시론은 문화적 차이와 타자의 권리를 상호인정하는 규범적 또는 유토피아적 (현실 세계에서 실현가능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 하고) 도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미스(M. P. Smith, 2001) 등이 제시한 초국가주의적 도시(transnational city)란 인종이나 정치적 공동체에 기반한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축된 도시로서,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 ‘동시에 진행되는’ 교차하는 지방적, 초지방적, 초국가적 실천들로 구성된다. 즉 초국가적 도시론은 특히 이러한 실천들이 장소만들기의 정치, 미분적 권력의 구성, 개인-집단-민족-국가-초국가적 정체성 만들기 등을 통해 초국가적 도시를 구축하게 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시론들은 도시를 단지 개별 단위 지역이나 장소로 인식하기보다 지구적 공간이나 네트워크 또는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는 보편적 가치 등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그 중심으로 도시를 분석 또는 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지구·지방적, 세계시민적, 초국가적 도시론들은 위에서 언급한 반지구화로서의 ‘지역화(경제)’론 또는 신도시주의와 관련된 최근 논의들⁵⁾에서 제시된 여러 도시 개념들이 지구화 차원을 무시하고 주로 개별 도시의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5) 좁은 의미의 신도시주의(new urbanism)은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교외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신도시주의 개념과 이에 근거한 정책들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도시재생 전략으로 비판되기도 한다(최병두, 2002).

서 그 대안적 또는 보완적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각기 상호 비판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특정한 문제점들, 즉 세계도시론의 경우 선진국 중심의 경제결정론이며 주체의 정책적 활동이 간과되었다는 점, 세계시민적 도시론의 경우 규범적 측면을 강조한 몰역사적 보편주의이며 대안적 경제 공간에 관한 사고가 결여되었다는 점, 그리고 초국가도시론의 경우 지구화의 구조적 차원을 무시한 미시주체적 환원주의이며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명시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시론들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 대한 지구·지방적 규모를 고려한 분석적 또는 규범적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과연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대안적 도시계획과 정책

도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이 교차하는 결절점 또는 핵심적 장소이지만, 또한 동시에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새로운 이론과 실천이 생성되는 터전 또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특히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도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억압적 형태의 배제와 불균등 발전이 구현되는 장소이지만, 탈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이론적으로 주창되고 정치적으로 실천될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지구·지방적 장소로서 도시는 탈신자유주의화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실현을 위한 정치적 참여와 민주적 실천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도시화가 탈정치적, 탈민주적이었다는 점에서, 탈신자유주의적 도시화를 위한 대안적 도시계획과 정책은 지구·지방적 민주화를 전제로 하며 또한 이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스윈저도우(Swyngedouw, 2009)는 탈정치적이고 탈민주적 질서를

초래한 현재의 도시 관련 논의를 비판하는 한편, 현재의 국가적 도시적 정치의 잔해 속에 흩어져 있는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 폴리스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적 조정’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실질적인 참여의 공간들을 압류했지만, 이러한 탈정치화된 도시 질서에도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전개될 수 있는 사이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도시화와 이를 위한 대안적 도시계획의 한 방안으로 숙의적(deliberative)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이 제안될 수 있다. 소통과 공론을 통해 ‘합의된 판단’을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는 생활중심의 실용정치, 사안별 이슈정치, 다양성과 관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성찰하게 하고 집단적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토양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강용진, 2008).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계획가는 계획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해서 포괄적인 공공의 참여를 촉진하고 계획가 자신이 직접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엘리트 거버넌스가 아닌 숙의적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를 차단하는 계획의 포용적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조철주, 2009: 360). 이와 같이 숙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생산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소외가 없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에 의해 제시한 도시계획의 규범과 전망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물리적 도시 프로젝트와 이에 의해 창출된 도시 질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이에 기초한 도시계획론은 사회공간 중심적 사고와 진보를 위한 개혁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조철주, 2009). 즉 신자유주의화는 계획의 대상으로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이윤창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숙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은 도시를 경

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적 공동체적 삶이 영위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한다. 또한 숙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은 기업가적 사고를 전파하는 계획에서 벗어나 진보를 위한 개혁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즉 페인스타인(Fainstei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보적 개혁의 가치를 포기할 때 계획은 부르주아적 도시를 좋은 도시의 이미지로 각색하는 기업가적 사고를 전파하는 선전수단으로 전락한다. 기업가적 사고에서 볼 때, 좋은 도시란 소외계층의 이해는 배제되고 은폐된 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청결, 질서, 새로움, 성장, 대형건물, 문화적 쾌적성, 치장된 주거단지 등의 이미지를 함축한다”(조철주, 2009: 35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숙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이론은 기존의 물리적 도시계획, 탈정치적 기업주의 도시계획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계획 역시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형(신도시주의, 도시디자인론, 스마트성장론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가 도시의 사회공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동체 복원 정책(최병두, 2006)이나 도시정체성의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 정책(최병두, 2008)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탈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소외가 없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의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공동체로서 도시는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민주적 사회자본의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도시발전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공동체는 여러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구체화될 수 있으며, 때로 ‘빛장도시’나 ‘담장도시’처럼 부르주아들의 폐쇄된 도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지만, 또한 하비(Harvey, 2000[200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린 희망의 공간’으로서 대안적 도시공동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공간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곽노완(2008: 84)은 “지구화시대의 도시들에서 공간 해방 투쟁은 산책할 수 있

는 안전한 보행로의 확충, 공적 공간에서의 접근성 제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광장 문화의 확장 등 지역적 차원의 투쟁과 동시에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열린 시공간을 확장하는 투쟁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적 자본에 근거를 둔 도시 공동체의 구축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대한 강조는 단순한 참여와 공개 토론에서 나아가 공동학습과 상호합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결론에 도달하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재)구성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공적 공간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특징짓는 관료적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급진적 민주주의를 위한 전망과 해방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곽노완, 2009; Springer, 2011). 즉 새로운 공동체와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또는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지배권력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고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만 관심을 가지는 ‘의사소통적 계획’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민중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를 계획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Fainstein, 2005; Gunder, 2010).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시장 자체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라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가 인간, 사회, 토지 등을 모두 상품으로 치부해 인간성을 파괴할 가능성을 가지지만, 또한 시장경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여러 자유들, 예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촉진한 이러한 자유의 가능성을 온전하게 실현시키는 작업은 결국 민주적 공공성 혹은 공적 공간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Polanyi [200]: 46; 나종석, 2009). 이러한 도시공동체의 구축과 공적 공간의 활성화는 어떤 물적 공간의 구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인들의 실천에 의해 역동적으로 생성/발전/소멸될 수 있다.⁶⁾

6) 이러한 점은 하비(Harvey, 2009a)가 제시하는 공간의 구분, 즉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련적 공간과 관련을 가진다. 신자유주의 도시 전략이 기본적으로

4.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지구·지방적 운동과 ‘도시에 대한 권리’

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지구·지방적 운동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인들의 실천은 물론 그 동안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즉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는 초국적 자본과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온 지구화의 불균등성과 위기 그리고 억압과 갈등들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지역적, 국가적 운동은 아마 신자유주의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지만(예로 1970년대 영국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했던 석탄노조의 파업), 신자유주의의 지구화에 반대하는 반세계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던 시애틀에서 수만 명의 시위로 전개되었던 뉴라운드반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반세계화운동은 국제무역과 금융을 통제하는 IMF, WT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와 시장통합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외에도 노조나 환경단체들이 조직한 반(또는 대안)세계화운동 단체들은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시민들과 약소국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또는 지구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반세계화운동이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어떠한 공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

절대적, 물리적 공간의 개념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비판된다면, 절대적 공간 개념에 기초한 탈신자유주의 도시 전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탈신자유주의적 공적 공간의 구축은 단순히 물리적 절대적 공간이 아니며 또한 사적 공간과 구분되는 상대적 공간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관련적 공간에 개념적, 실천적으로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지만 대체로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화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과 지구적 차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지역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벗어나서 대안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볼 수 있다.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화에 직접 개입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사례로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과세연합: 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pour l'Aide aux Citoyens)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김의동, 2009). Attac은 프랑스 지식인운동으로 시작해 불과 몇 년 사이에 프랑스의 경제정책과 반신자유주의 및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 413개 기관회원과 216개의 프랑스 지역위원회 등에서 1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50개국에서 9만 명의 회원이 분포해 있다. 이 단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세계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피해를 지적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유발되는 많은 문제들을 세계에 알리고, 그 대안 마련을 역설했고, 또한 2008년 이후 서브프라임사태가 세계경제 위기로 확대되면서 세계금융체제 개혁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세계적 과제를 부각시키면서, 반신자유주의 및 대안세계화를 전 지구적 문제로 확장시키고 동시에 전 지구적 해결책을 요구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 단체의 내적 운영과 운동의 성향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만, Attac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혹은 '민주적 세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구적 정의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화의 지구적 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은 선진국의 지식인 운동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및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운동과 결합될 때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지구적 차원을 배경으로 전개되지만, 실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개별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 운동은

도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공동체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율적 생활세계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는 대안공동체 운동은 부르디외(Bourdieu)의 사회자본론이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공동체 구축에서부터 근대 아나키즘(프루동과 크로포트킨 등)에 근거하여 협력과 연대의 순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운동, 사회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복지운동, 또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코뮌(어소시에이션)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운동들은 각기 다른 모습의 이상적 사회공간을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적 차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지역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벗어나서 대안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적 사회체제와는 다른 자율적 생활공간을 대안적 공동체로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자주적 관리를 지향한다.

생활공간 또는 지역사회를 전제로 한 이러한 대안적 공동체 운동은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간과한 채 국지적 차원에 한정된 특정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은 아니다. 달리 말해, 탈신자유주의운동은 기본적으로 지구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을 벗어나기 위한 지구·지방적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탈신자유주의운동의 공간적 규모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장 자본주의와 더불어 중앙집중적 통제경제의 질서 수용도 거부하며 또한 동시에 소규모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시도되는 공동체 실험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한 윌리엄스(R. Williams)의 『희망의 근원』에서 잘 지적되고 있다. 즉

“규모의 문제는 단순히 큰지 작은지라는 관습적 대비보다 복잡하다 — 사회주의적 [또는 탈신자유주의적] 개입은 자기관리(self-management)의 극대화라는 독특한 원칙을 도입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생존가능성 및 공동체들 간 납득할만한 형평성에 대한 고려와만 결합될 수 있고, 중앙집중적 국가의 행정적 편의라는 지배적 기준과는 결정적으로 단절될 것이다. — 예

측 가능한 사회주의[또는 탈신자유주의] 사회는 충분히 적절한 일반적 권력들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력들은 심층적으로 조직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중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Williams, 1989: 273~275).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운동에서 규모의 정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공간적 규모에서의 해결방안은 다른 공간적 규모에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로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국제금융자본에 반대하는 운동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작동하는 자본의 옹호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두 개의 공간적 규모에서 동시에 자본과 투쟁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다른 공간적 규모에서 그 자체 내에 잠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를 조정하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한다”고 하비(Harvey, 2000[2001]: 83)는 주장한다. 이러한 규모의 정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정치는 공간적 규모의 문제가 항상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는 보편적 가치와 국지적으로 작동하는 장소-특정적 가치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이러한 연계를 매개하는 것은 ‘민중의 힘’이다. 분명 실천을 위한 민중의 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러한 민중의 힘을 단합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윌리엄스의 『희망의 근원』을 『희망의 공간』으로 제목을 바꾸면서,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 담론과 국지적 차원의 신체 담론을 연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권리’의 개념을 도입한다.

2)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도시에 대한 권리’

하비는 『희망의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마르크스는 권리에 대한 모든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지만 부르주아적 함정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에 관한 의미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세계의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단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가?”(Harvey, 2000[2001]: 41) 물론 마르크스가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 즉 노동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는 노동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 주장을 제기한다. 즉 “노동의 권리는 부르주아적 의미에서 터무니없는 것이며, 가련하고 헛된 소망이다. 그러나 노동의 권리[에 대한 주장의] 배후에는 자본에 대한 지배 요구가 있고, 자본에 대한 지배 요구 배후에는 생산수단을 점유하여 그것을 단결한 노동계급에게 종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본과 노동, 그리고 그들 상호관계를 폐지시키자는 요구가 있다”(마르크스, [1991]: 77~78; 강내희, 2009: 67에서 재인용). 마르크스가 여기서 제시한 노동권은 단순히 일자리를 요구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지배’, 즉 자본이 행사하는 모든 소유권의 폐기, 나아가 노동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자본의 소유권에 앞선다는 의미를 가진다(강내희, 2009: 68).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권리 운동은 이러한 노동권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의 과정과 그 산물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노동자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 주장되고 실현되어야 할 장소는 오늘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도시(또는 그 이상으로서 코뮌)에 대한 권리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는 1968년 이른바 프랑스 68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페브르가 같은 해 출판한 책의 제목이자 이 책의 핵심적 주제였다. 그는 이 책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는 — 도시생활에 대한 권리, 부활된 도시 중심성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환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과 장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다”(Lefebvre, 1968[1996]: 179).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고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강현수, 2010: 38~39).

탈신자유주의로 전환하더라도 세계는 여전히 도시의 시대일 것이다. 도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조건 지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주창자들은 도시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집합적 공간으로 이해한다. 즉 도시에 관한 권리는 단지 도시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할 권리 그리고 도시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시민 자신을 자율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인간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깨끗한 물과 공기, 먹거리, 에너지(전기와 연료 등)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적절한 주거와 직장을 가지고 잠자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도시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교육, 교통, 안전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또한 도시의 공적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도시 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의 실행과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진보적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입장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사회와 그 구성원인 개인 간 관계를 계약론적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사회로부터 생명과 생존을 위해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적 입장은 오늘날 도시가 인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시계약론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⁷⁾ 이러한 점에서 실제 UN-Habitat와

UNESCO 등의 국제기구와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등의 도시정부들은 도시권을 헌장으로 제도화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정된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의 제1조에는 “도시는 삶의 공간이며 인간의 존엄성, 관용, 평화, 포용, 평등의 가치가 도시 안의 모든 시민들 사이에서 증진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강현수, 2010: 56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은 기존에 국민국가를 단위로 이해되었던 인간 권리나 시민권의 개념을 도시를 배경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Purcell, 2003; Fawaz, 2009).⁸⁾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이 증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황폐화된 도시인들의 삶과 인권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는 헌장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등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도시권의 제도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는 도시권에 내재된 해방적 힘(즉 새로운 도시공간의 생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의 질서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Mayer, 2009; 황진태, 2009: 36).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의 두 가지 측면, 즉 도시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요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

7) 사실 르페브르는 사망할 시점에 『시민권의 계약(Du contrat de citoyenneté)』을 집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유럽통합과 초국적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시민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필요한 새로운 시민권은 각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다원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현수, 2010 참조). 이 책의 일부 내용은 *From the social pact to the contract of citizenship*이라는 제목으로 영역되어 있다. Elden et al., 2003: 238~254 참조.

8) 그러나 시민권(citizenship)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시민성의 개념은 단지 도시인들의 권리(그리고 의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원의식, 소속감, 상호인정 과도 관련되며, 특히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간 통합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형성되는 다차원적 또는 다규모적 시민성이라는 점에서 개념화되고 있다. Painter and Philo(1995), Rogers(1998) 등 참조.

간을 새롭게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하여 급진적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도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실질적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을 탈신자유주의화시키기 위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도시 공적 공간의 구축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도시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광노완(2011)이 제안한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의 주장에서 ‘공적 공간’의 개념은 ‘도시 공유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즉 그에 의하면, 도시권의 개념이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공적 공간은 사실 특권층의 배타적 공간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적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는 도시권 대신 도시거주자 및 외부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공유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분명 근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규범적으로 강조했던 초기 공적 영역으로서 공적 공간의 개념은 점차 부르주아들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고, 심지어 현대사회에서 공적 공간은 구성원들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공간으로 전략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공간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공간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노완이 제안한 도시공유권 개념은 토지의 공유화를 요구하는 마르크스주의 및 헨리 조지의 지대론에 근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토지의 공적 소유와 사적 점유(이용)를 구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친밀공간’을 공적으로 소유되는 공유공간과 혼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라는 명제는 탈신자유주의화를 위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시권의 개념을 그 동안 사회주의로의 전환에서 토지의 공유화 문제에 관한 오랜 논의 주제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가진다.

도시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는 토지 공유화와 같은 오래된 문제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 즉 하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 가슴 속의 희망을 좇아 도시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권리이다. 나아가 도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지배

하는 집합적 권력의 작동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공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도시를 창조·재창조하는 자유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되었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Harvey, 2008: 23; 강현수, 2010: 42에서 재인용). 하비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권인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신자유주의에 의해 무시되고 위협받아 왔으며, 따라서 탈신자유주의적 도시화를 위한 집합적 권리를 요구하는 도시사회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된다. 즉,

이러한 투쟁들의 통합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운동의 슬로건이자 정치적 이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도시화와 잉여생산 및 이용 간 필수적인 연계를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탈취 당한 자들이 그들이 오래 동안 거부되어 왔던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도시화의 양식을 제도화하려면, 도시에 대한 권리의 민주화 그리고 이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구축이 필수적이다(Harvey, 2008: 40).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탈취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시공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용하며, 나아가 새로운 도시화 양식을 제도화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시킬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 가슴 속의 희망을 좇아’ 새로운 도시공간을 생산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지 하비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지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될 뿐만 아니라 인간주의적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선하는 지리학자들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예로, 엔트리킨(Entriki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 장소와 자아가 상호 구성적이라면 민주주의의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 자아의 창출 수단은 장소 만들기과 병행한다. 장소 구성

하기에서, 우리는 장소를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프로젝트의 이상과 조응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이상은 사회적 정의, 관용, 포용을 촉진하는 장소를 건설하고, 공동체에 관한 집단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적 모임 공간 또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함한다. — 생활형태이며 과정으로 이해된 민주주의는 장소 만들기, 장소 허물기, 장소 다시 만들기를 포함한다(Entrikin, 2002: 107~108).

이러한 주장은 탈신자유주의적 도시화를 위한 전망으로서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도시공간 특히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서 장소 만들기는 “민주주의의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 자아의 창출”과 병행하며, 이러한 이상적 자아의 창출은 결코 개인의 이상적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 자아, 즉 공적 이성의 창출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도시(공적)공간의 새로운 구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자아(공적 이성)의 구성은 단지 국지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그러하듯이 지구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이 상호관련적이고 동시 구성적이라는 점의 인식을 전제로 다규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차이의 인정과 관용과 같은 도시의 보편적인 사회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도시가 가지는 경로의존적 조건들에 대한 권리들, 즉 도시에서 생산된 자원의 형평적 배분에 대한 권리, 나아가 도시(에서)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최근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어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위기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

의 일반은 그 자신의 한계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면한 문제들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해소, 지연 또는 은폐된다면, 우리의 사회나 도시가 외형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다른 이름으로 호명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신자유주의화는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단절적으로 반대되는 이념이나 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봉착한 이러한 한계와 문제들을 새로운 대안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연구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의 한계(특히 금융위기의 메커니즘) 또는 이것이 드러내는 문제들(사회공간적 양극화와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다소 이념적,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주요한 이론적, 실천적 전략은 대안적 도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는 대부분의 인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생산의 용광로이며, 앞으로도 도시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현대 도시는 지구화과정에서 탈영토화된 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영토화되는 지구·지방적 장소이다. 이에 따라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도시들은 부유한 계층들이 더욱 부유하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또한 도시에 가장 극단적인 억압과 배제, 불균등 발전이 구현되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도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탈신자유주의적 사회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이 구축되고 실천이 전개되는 장이기도 하다. 즉 도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소용돌이치는 중심지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중심지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사회공간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의 조건과 해방적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엘리트들이 주도해 온 도시화가 새로운 탈신자유주의적 도시화로 전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건조환경으로서 자본축적(또는 하비의 용어로 ‘탈취에 의한 축적’)의 물적 토

대였고 탈정치화와 탈민주화를 도모했던 장이었던 도시가 아무런 실천적 노력이나 희생 없이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생태적 환경이 되고, 정의와 민주가 실현되는 새로운 경제정치적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윈그도우(Swyngedouw, 2009)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탈정치화된 도시 질서에는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생존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새로운 사이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이 공간은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이며 공적 이성이 새롭게 창출되는 장소 모임이 될 것이다. 공허한 상상이 아닌 현실의 공간에서 우리는 유토피아적 장소에 대한 상상력을 시작하고, 탈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lternative Urban Strategies for Post-neoliberalism

Choi, Byung-Doo

As limits of neoliberalism in recent years have appeared in varying tangible phenomena such as global financial crises and expanding socio-spatial polarization, so discussion on post-(or anti-)neoliberalism and exploration for alternative urban strategies become very urgent and highly important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neoliberalism and serious urban problems. But recent discussions on post-neoliberalism seem to be somewhat superficial and confine themselves into narrow few subjects, partly because they could not see or have ignored both significance of ‘spacial scale’ approach and importance of alternative urban strategies. This paper hence is first of all to consider limits of neoliberalism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discuss both significances and difficulties of recent discussion on post-neoliberalism, secondly to examine a possibility of new urbanisation under alternative globalization and necessity of new urban planning on the basi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finally to argue for ‘the right to the city’ in its conceptu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and for glocal movements leading for postneoliberalism.

Keywords: neoliberalism, postneoliberalism, ‘spacial scale’ approach, alternative urban planning, the right to the city

참고문헌

- 강용진. 2008. 「숙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숙의정치의 활용과 정치발전」. 《대한정치학회보》, 15(3), 67~96.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곽노완. 2008. 「글로벌폴리스와 희망의 시공간: ‘글로벌 시티’ 담론과 하비의 ‘희망의 공간’에 대한 비판과 변형」. 《사회 이론》, 33, 61~88.
- _____. 2009. 「글로벌 아고라의 도시 철학」. 《마르크스주의연구》, 14, 124~151.
- _____. 2011.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23, 202~220.
- 김의동. 2009. 「대안세계화 운동에서의 Attac의 성과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17(2), 240~285.
- 김창근. 2009.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인 지역화 대안」. 《마르크스주의 연구》, 16, 12~55; 정성진 외.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 한울(재계재).
- 나종석. 2009. 「신자유주의적 시장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 시장주의를 넘어 민주적 공공성의 재구축으로」. 《사회와 철학》, 18, 187~216.
- 뫼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2007.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문화과학사.
- 본드, 패트릭(Bond, Patrick). 2010. 「탈신자유주의의 현실: 남아공의 사례」. 정진상 외. 『대안세계화운동의 조직과 전략』. 한울.
- _____. 2011. 「대안세계화운동으로서의 기후정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 정진상 외. 『대안세계화의 운동, 정치, 그리고 연대』. 한울.
- 이정구. 2011. 「한국에서 진보좌파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23, 47~75.
- 장대업. 2010. 「아시아의 대안세계화 운동: 새로운 공간의 정치」. 정성진 외.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 한울.
- 정성진·이정구·장대업·김의동·김창근. 2010.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 한울.
- 정성진·장대업·장시복·김창근·김의동. 2010. 『대안세계운동의 이념』. 한울.
- 정승일. 2007. 「신자유주의와 대안체제」. 《창작과 비평》, 35(3), 187~204.
- 정진상·장상환·김영수·김정주·이승협·패트릭본드. 2010. 『대안세계화운동의 조직과 전략』. 한울.
- _____. 2011. 『대안세계화의 운동, 정치, 그리고 연대』. 한울.
- 조철주. 2009. 「탈근대적 계획환경 정합적 계획을 위한 근대계획의 재구성」. 《도시행정학보》, 22(3), 341~364.
- 최병두. 2002. 「신도시주의 또는 새로운 도시화」. 《공간과 사회》, 17, 217~242.
- _____. 2006.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0(4), 513~528.

- _____. 2008.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604~626.
- 최병두·김홍중·박지웅·안현효·김재훈. 2010. 『신자유주의에 대하여—신자유주의 쇠퇴기에 생각해 보는 새로운 전망』. 열린길.
- 황진태. 2010.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34, 33~59.
- Albo, G. 2006. “The limits of eco-localism: scale, strategy, socialism.” in Panitch, L. and Leys, C.(eds). *Coming to Terms with Nature* London: Merlin press, 337~363; 그레고리 앨보. 허남혁 외 역. 2007. 「생태지역주의의 한계—규모, 전략, 사회주의」. 허남혁 외 역.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 423~459.
- Brand, U. and Sekler, N. 2009. “Postneoliberalism: catch-all word or valuable analytical and political concept? - aims of a beginning debate.” *Development Dialogue*, 51, 5~14.
- Brenner, N., Peck, J., and Theodore, N. 2010. “After neoliberalization?” *Globalizations*, 7(3), 327~345.
- Douglass, M. 2008. “Globalpolis or cosmopolis—alternative future of city life in East Asia.” *Searching for a ‘Globalpolis’ as a Progressive Urban Utopi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제4차 동아시아 대안지리학 대회 자료집, 2008.12.15).
- Elden, S., Lebas, E., and Kofman, E. (eds). 2003. *Henri Lefebvre: Key Writing*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Entrikin, J. N. 2002. “Perfectibility and democratic place-making.” in Sack, R. D. (ed). *Progress: Geographical Essay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7~112.
- Fainstein, S. S. 2005. “Planning theory and the c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5, 121~130.
- Fawaz, M. 2009. “Neoliberal urbanity and the right to the city: a view from Beirut’s periphery.” *Development and Change*, 40(5), 827~852.
- Friedmann, J. 1986.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1), 69-83.
- Gunder, M. 2010. “Planning as the ideology of (neoliberal) space.” *Planning Theory*, 9(4), 298~34.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최병두 외 역. 2001. 『희망의 공간』. 한울.
- _____.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P.;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 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 _____. 2009a. *Cosmopolitanism and Geographies of Freedo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최병두 역. 근간.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 삼천리.

- _____. 2009b. "Is this really the end of neoliberalism?" *Counterpunch*.
<http://www.counterpunch.org/harvey03132009.html>.
- Lefebvre, H. 1990. *Du contrat de citoyennete* Paris: Syllepse.
- _____. 1968. *Le droit à la ville* Anthopos. Paris; trans. in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 Mark, K. 임지현·이중훈 역. 1001,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 Mayer, M. 2009. "The right to the city in the context of shifting mottos of urban social movements." *City*, 13(2-3), 362~374.
- Painter, J. and C. Philo, 1995. "Spaces of citizenship: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14(2), 107~120.
- Peck, J., Theodore, N., and Brenner, N. 2009. "Neoliberal urbanism: models, moments, mutations." *SAIS Review*, 29(1), 49~66.
- _____. 2010. "Postneoliberalism and its Malcontents." *Antipode*, 41, 94~116.
- Polanyi, K. 홍기빈 역. 2002. 칼 폴라니.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책세상.
- Purcell, M.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564~590.
- Rogers, A. 1998. "The spaces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 201~213.
- Sandercock, L. 1998. "Towards cosmopolis: a postmodern agenda." Brenner, N. and Keil, R. (eds). *The Global Cit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ssen, S. 2001(2nd edn). *The Global C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kler, N. 2009. "Postneoliberalism from a counter-hegemonic perspective." *Development Dialogue*, 51, 59~71.
- Smith, M. 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Oxford: Blackwell.
- Springer, S. 2011. "Public space as emancipation: meditations on anarchism, radical democracy, neoliberalism and violence." *Antipode*, 43(2), 525~562.
- Swyngedouw, E. 2009. 「탈정치적 도시의 자가당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편. 《도시인문학연구》, 1(2), 7~44.
- Williams, R. 1989. *Resources of Hope* New York: Verso.